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ky@gmail.com

노동본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참정권 보장' 환영
지난 1월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공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노동자들에 대한 위헌적
참정권 침해 행위,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가 공공기관의 상근직원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폭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지난 1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제목의 공문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에 따라 공사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는 19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위헌적 참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공사는 5월 8일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며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했다. 특히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국가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노동본부의 지적에 공문 작성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재배포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이 법 개정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본부는 향후 선거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서울교통공사 공문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5월 19일

담당부서 :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청렴감찰처장

김항용

02-6311-9960

담당부장

송명훈

02-6311-9967

공사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침해 논란...서울교통공사 '선거운동 금지' 공문 발송-
(‘25. 5. 19. 국제뉴스)

<주요 내용>

-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됐음에도 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 공사 감사실은 지난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음.
 -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대상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하여 문서를 작성함.
 - 이에 공사 감사실에서는 공사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문서를 시행했으며,
 -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에 따라 공사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음. 끝.